

원조를 넘어 연대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3대 정책제안 (2026-2030)

대안적국제개발시민사회네트워크 KOSODA

Korean Solidarity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2025년 8월

KOSODA의 3대 제안

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3.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 강화

대안적국제개발시민사회네트워크 KOSODA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국제민주연대(KHIS), 발전대안 피다(PIDA),
사단법인 아디(ADI), 해외주민운동연대(KOCO)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안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제안배경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하다.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이 모든 위기와 갈등을 심화하는데, 그 피해 마저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돌아간다. 위기의 최전선인 지구촌 남반구에서는 더 많은 연대와 “선진국”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선진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빈곤퇴치와 같은 가치보다 자국과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열심이다.

올해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핵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원조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취소¹⁾했고, 영국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약 0.5%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027년까지 GNI의 0.3%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²⁾했다. 또한 극우세력이 곳곳에서 득세하며 난민 혐오와 지원 삭감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 위기, 기후위기, 민주주의 위기, 인권 위기 등에는 국경이 없다. 글로벌 위기가 곧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되는 세상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외교가 아닌 글로벌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외교,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진정 “국익”을 추구하는 길이다.

글로벌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이미 <국제개발협력법>의 기본 정신에 명시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특히 목표1(빈곤 종식), 목표5(성평등), 목표10(불평등 완화), 목표13(기후행동), 목표16(평화와 정의), 목표17(파트너십)의 달성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국제개발협력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1] 박성민, ‘美국무장관 “USAID 프로그램 83% 취소…일부는 국익에 피해”’, 연합뉴스, 2025년 3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155200071>.

[2]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Spending Set out in Spring Statement’, GOV.UK, 2025년 3월 27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ture-international-development-spending-set-out-in-spring-statement>.

제안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문제제기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상생의 국익 추구’를 최상위 비전으로 설정하며 ‘국익 추구’를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뒤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ODA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고, 무기 수출 촉진을 위해 ODA를 결합하는 모델을 제시³⁾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을 외교와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20년 41.3%에 달하던 양자 간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2024년 24.9%까지 떨어졌고⁴⁾, 3기 중점협력국(2021~2025)에 하위중소득국만 추가(인도,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되기도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ODA가 한국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과 같은 이권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⁵⁾ 한편, 분쟁과 평화, 안보를 위한 ODA는 전체의 1%에 머물렀다.⁶⁾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식민과 전쟁, 원조 수원,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을 모두 경험한 한국 맥락의 국제개발협력은 단기적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진국”과는 달라야 한다. 한국 발전의 토대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중심에 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효과를 더 높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대할 수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다.

[3] 문제원, ““올해 방산수출 200억달러 달성”...정부, ODA 연계 맞춤형 지원”, 아시아경제, 2024년 6월 12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216345193954>.

[4] 국무조정실, ‘소득그룹별 지원’, ODA Korea, 2025,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ype=Stats#/mainLayout>.

[5] 발전대안 피다, ‘피다부: [2024 정부 예산안] ODA를 상업적 이익보다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 발전대안 피다, 2023년 9월 15일,

<https://pida.or.kr/articles/?q=YToxOntzOiEYoiRZXI3b3IkX3R5cGUiO3M6MzoiYWxslit9&bmode=view&idx=16352086&t=board&category=201063B213>.

[6] 오지영&박소정, 국제사회의 분쟁취약국 지원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제안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KOSODA의 제안

단기적 국익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제개발협력의 상위 목표로 제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국익이 아닌 글로벌 위기 대응과 글로벌 가치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최빈곤국 및 최취약층 지원, 인도적지원, 분쟁과 평화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 모든 사업이 빈곤과 취약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빈곤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의 주요 목표로 명시하도록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한 다면적 접근 확대

- 한국 민주화와 인권 발전 경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서사와 프로그램 ODA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화공공외교협력단” 사업과 평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의 연계 등
- 2030년까지 민주주의의 쇠퇴, 인권 침해, 갈등 심화 등 국내외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SDG 16(평화, 정의 및 제도구축)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늘려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지원한다.
 - 제안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참고

기후위기 대응과 난민 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현지 취약층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 국제 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 지원 ODA를 증대하고 국내외 난민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확대한다.
- 국내외 난민과 이주민과 연대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난민·이주민 인식 개선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제안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제안배경

공여국이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2~2023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양자 ODA 중 13%, 연간 약 270억 달러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집행되었다.⁷⁾

현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활성화, 효율적인 개발 서비스 제공, 주인의식 고취 등에 있어 중요한 개발 주체이고, 협력대상국 발전에 있어 정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중요한 행위자이다.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2016년 발표한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에서 제시한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이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지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9년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에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주요 이행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여러 차례 보여주었듯,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힘은 시민사회에 있다. 현지의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를 발굴,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와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육성하고 연대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고, 심화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공여국과 인도주의 단체는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합의안을 채택했다. '인도적 대합의'라 불리는 이 합의에는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과 더불어 현지의 대응 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 노력 등 현지화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⁷⁾ OECD, 'Aid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Statistics Based on DAC Members' Reporting to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CRS), 2022~2023', 2025, [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4/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4/en/pdf)

제안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문제제기

한국 ODA의 국내외 시민사회 협력은 매우 부족하다. 2023년 한국 양자 ODA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집행된 지원은 전체 평균 1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약 6,800만 달러)로, 비율 기준으로는 33개 공여국 중 28위이다.⁸⁾

정부는 2019년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에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2023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는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확대(시민사회 프로그램 내 현지 역량강화 및 정부 연수 프로그램에 개도국 시민사회 참여 등)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명시했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간한 정책 문서 중 ‘개도국 시민사회’를 언급한 문서는 네 개에 그칠 정도로 정책 이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미비했다.⁹⁾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현지 시민사회 직접 지원 프로그램인 “현지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LCPP)”의 후속 프로그램 또한 오랫동안 부재했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전략 목표로 “우리 시민사회의 현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 촉진”을 통한 “현지 시민사회의 자생적 역량강화”를 제시¹⁰⁾ 하는 등, 현지 시민사회 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지 시민사회를 한국 시민사회의 도움을 받아 역량을 강화해야 할 존재로 여기거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이미 국제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정 정도의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은 역동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글로벌 위기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남반구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은 평등과 다양성, 상호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⁸⁾ OECD, ‘Aid for Civil Society Organisations: Statistics Based on DAC Members’ Reporting to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CRS), 2022-2023’, 2025, [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4/en/pdf](https://one.oecd.org/document/DCD(2025)4/en/pdf)

⁹⁾ 발전대안 피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및 제안 보고서”, 2024, <https://pida.or.kr/resources/?q=YToxOntzOiJlZmVudC5cGUzO3M6MzoiYWxslit9&bmode=view&idx=162542768&t=board>.

¹⁰⁾ 정유아, ‘시민사회협력사업 개편안 초안’, 2026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공모설명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2 May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dBrIf9VGDCw>.

제안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KOSODA의 제안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 현지 생산 지식의 가치, 상호 학습의 잠재력, 국제사회에서의 현지화 강조 등을 고려해,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2028년까지 이행 방안을 수립한다.
- 이때 현지화는 단순한 지원과 단기 성과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넘어, 현지 시민사회의 권한 확대와 강화, 나아가 현지 시민사회 공간의 확대를 의미하며, 다양한 규모, 활동 영역, 목표, 핵심 가치, 등록 형태를 가진 현지 시민사회 조직을 포함할 수 있는 포용성과 유연함을 지향한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

- 2030년까지 기존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및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내에 현지 시민사회협력 트랙을 신설하여 NGO, 주민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현지 시민사회 주체에 사업비 및 간접비, 혹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한다.
 - 세부 협력 방안: 1)2012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에서 운영한 현지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LCPP)과 같은 현지 시민사회 직접 지원 방식, 2)현행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한국 NGO가 현지 시민사회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의무화 및 확장, 3)현지 및 지역에서의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 혹은 컨소시엄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중간지원 조직으로 여러 현지 시민사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 등
- 현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연대와 상호학습, 자율성 존중 원칙에 기반하여 한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 지침을 수립한다.
- 역량강화 교육 및 한국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현지 시민사회 활동가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현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숙에 기여한다.
-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국제질병퇴치기금(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 부과)을 '시민연대기금'으로 재출범하여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시민 대 시민 협력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대응 자금을 투입한다.

제안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KOSODA의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 내 현지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주로 협력대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대상과 방식을 시민사회와 상호 교류 및 학습으로 확대한다. 현지 시민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 또한 글로벌 연수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여, 현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의제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현지를 찾아 교류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나눔운동이 KOICA 개발협력연대(DAK) 정책협력사업으로 수행한 “우즈베키스탄 중심 중앙아시아 시민사회 SDGs 정책역량 및 한-중앙아 CSO 파트너십 강화사업(2022-25)”처럼 한국과 현지의 NGO가 협력하며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 등

제안3.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 강화

제안배경

한국의 ODA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19억 달러 → 2024년 39억 달러)하고 있고, 개발협력의 주체도 정부와 NGO 외에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참여 설명회를 열거나 기업 협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하고 있고, 이때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과 국내의 경제 및 실업 문제 해결이 부각되곤 한다. 다양한 주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거나 현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 기획과 수행, 평가 등 사업 전반에서 인권,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

2012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 중인 필리핀 할라우강 개발 사업에 대해 현지 선주민 공동체가 한국 정부에 현지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¹¹⁾하고, 2018년 EDCF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 무너져 71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연루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주로 사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도 현지에 미치는 인권·환경·사회 영향에 관한 고려는 각 수행 기관의 서약과 체크리스트 작성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진정과 진정 이후의 처리 절차는 부실하고 불투명하다.

EDCF에는 영문으로 된 세이프가드가 있으나 국문본이 없고 책무성 메커니즘과 환경·사회 영향조사 결과 등에 관한 실질적 접근성 및 투명성을 보장할 내용이 부재하는 등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다. KOICA는 2018년 <인권경영현장>과 <인권경영규정>을 수립하고 KOICA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참여 단체나 기업 등 “협력기관”도 인권 존중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책임 이행 및 점검 방안이 부족하고 조직도 기준 인권경영 담당 직원이 1명만 존재¹²⁾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까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¹¹⁾ IPMSDL, ‘Land, Water, Life: Resist the Flood of Injustice, Stop the Jalaur Mega Dam’, Indigenous Peoples Movement for Self-Determination & Liberation, 2025, <https://www.ipmsdl.org/campaign/land-water-life-resist-the-flood-of-iniustice-stop-the-jalaur-mega-dam/>.

¹²⁾ 2025년 7월 조직도(https://www.koica.go.kr/koica_kr/861/subview.do) 기준 KOICA의 인권경영 주무 부서인 ESG·소통팀에서 인권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은 1명으로 ESG 일반, 적극행정, 환경 관련 업무와 더불어 인권경영 업무(파트너 인권위협 관리, 인권경영 이행·평가·교육 계획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제안3.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 강화

KOSODA의 제안

ODA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2027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인권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책무성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책무성 소위원회는 주요 ODA 수행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모니터링·평가하고, ODA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구제 신청 처리 과정을 점검하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2028년까지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인권존중책임을 전면 도입하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과 인권 보장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사업 선정의 핵심 평가 기준에 포함한다. KOICA 국별협력사업이나 EDCF 차관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인권 및 환경 조사자를 포함하여, 현지 주민의 참여 하에 독립적으로 해당 사업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2026년부터 용역 수주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로부터 “인권존중 실천 서약서”를 받고 핵심 사업 관계자들은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권리 침해 신고 및 구제제도 강화

- 2028년까지 실질적인 권리 침해 신고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EDCF와 KOICA의 세이프가드 관련 정책¹³⁾을 개정한다.
- 특히 현재는 한국 정부의 ODA 사업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EDCF 홈페이지나 코이카 인권 담당자 이메일로만 문제제기 및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현지 사무소와 본부 방문 접수, 전화 접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이를 현장 주민 교육이나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무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접수 이후의 절차, 시민사회 참여, 정보 공개 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세부 내용도 수립한다.
- 현재 만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지 파트너 및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사회적 불평등 강화 등에 관한 의견 조사의 창구로 활용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업 및 단체 정보 접근성 강화

- 유무상 ODA 사업의 수행 주체, 인권 실사 정보 등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¹³⁾ EDCF, 'EDCF SAFEGUARD POLIC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cessed 1 July 2025, <https://www.edcfkorea.go.kr/he/HPHYFE068M01#tab6>. KOICA, 'Report Violation of Human Right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cessed 1 July 2025, https://www.koica.go.kr/koica_en/8346/subview.do.

원조를 넘어 연대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3대 정책제안

대안적국제개발시민사회네트워크 KOSODA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ICE
<https://www.ice-network.org/>
국제민주연대 KHIS
<http://www.khis.or.kr/>
발전대안 피다 PIDA
<https://pida.or.kr/>
사단법인 아디 ADI
<https://www.adians.net/>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https://kocoasia.org/>

본 정책제안서와 KOSODA 관련 문의·연락
swoo.africa@gmail.com